

# 온실가스, 정유·제철에 절대량 할당

## 전체 감축량 1720만CO2톤 중 10사가 54% ... S-Oil·SK는 2% 이상

10월15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보면 상위기업 10사가 산업계 목표량의 절반을 채워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산업·발전부문 377사의 2013년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가 1720만CO2톤이라고 발표했다.

예상 배출량이 5조7060만CO2톤인데 허용량은 5조5340만CO2톤이다.

감축량은 2012년 800만CO2톤보다 2배 이상 늘었으며 감축률도 3%로 2011년 1.42%에 비해 높아졌다.

산업부문이 950CO2톤을, 발전부문이 760만CO2톤을 감축해야 한다. 일부 업종 및 주요기업에 감축 의무가 많이 부여됐다.

산업부문에서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상위 3개 업종이 650만CO2톤으로 68%를 담당해야 한다.

가장 목표량이 많은 기업은 포스코로 산업부문 할당량의 26.0%인 248만CO2톤을 감축해야 한다.

이어 현대제철 48만7000CO2톤(5.1%), 쌍용양회 44만3000CO2톤(4.6%), 동양시멘트 28만4000CO2톤(3.0%), S-Oil 26만6000CO2톤(2.8%), GS칼텍스 24만7000CO2톤(2.6%), SK에너지 24만1000CO2톤(2.5%), LG디스플레이 22만8000CO2톤(2.4%), 삼성디스플레이 22만3000CO2톤(2.3%), 삼성전자 21만6000CO2톤(2.3%) 순으로 목표치가 설정됐다.

상위기업 10사의 목표치는 산업부문 전체 감축량의 53.7%에 해당한다.

발전부문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에너지 판매량과 연계했지만 2013년부터는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총량방식으로 전환한다.

전기와 열 생산량을 자체 의지만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존 방식을 보조적인 평가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013년 산업부문이 목표치를 달성하면 전기자동차 550만대를 도입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발전부문은 50만kW급 화력발전 설비 2.5기를 건설하는 것에 맞먹는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허용치를 늘리려고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과대하게 설정하려는 시도를 얼마나 차단했는지도 주목된다.

지식경제부는 계획을 세울 때 관련기업들이 신·증설 목표치를 부풀려 온실가스 허용 한도를 늘리지 못하도록 신경썼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2년 관리대상 275사의 연말까지 신·증설 예상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8월에 점검한 결과, 2011년에 밝힌 계획보다 20% 정도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치 못했던 변수로 발생한 신·증설 차질도 영향을 미쳤지만, 감축 부담을 줄이려고 예상 배출량을 일부러 과도하게 설정했던 것도 한 몫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15>